

(첨부) 시선2021-2월

## 다시 길에서

해방을 기다리며, 길을 떠난 사람들

평생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2018년 4월 투병 중 수술대에 오르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유언과도 같은 영상을 남겼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인 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의 그 맥락 위에서 있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더 하나만 곁들일까요? 지난 촛불 혁명이 뭐요? 우리 한반도의 참된 평화요 민주요 자주통일 민중이 주도하는 해방통일이었습니다. 그 맥락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민중적 자부심과 민중적인 배짱을 갖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월15일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 민중들을 대변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김진숙,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을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언제 다가올지 모를 해방된 내일을 기다리며 길에서 있다. 김진숙은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일터에서, 김미숙은 죽음으로 내몰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두운 작업장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안타까워하며, 세월호 유가족은 죽은 아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정치가 정권이 외면할지라도 각자의 해방을 숨죽여 기다리며 길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지난 2월15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구조 관련 책임자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러나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인 퇴선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은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규명에도 무관심했지만, 자신들의 무능은 적극적으로 은폐해 왔다. 그들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교신 녹취록의 일부를 삭제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무능했을 뿐,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구조업무를 회피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을 제외한 해경지도부는 수사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뒤늦게 해경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해경 구조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 곧 일곱 번째 사월이 다가오지만, 그 사월은 물으로 나오지 못한 채 바다 속에 잠겨있다. 관료에 포획되고, 정략에 흔들리고, 욕망에 찌든 채, 백기완의 당부는 허공에서 울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은 다시 광장에서 진실의 촛불을 들고, 해방이 올 때까지 길에서 기다려야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바다에 갇힌 나라, 인양되지 않은 진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연안여객선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를 지나다가 8시 49분 기울기 시작하여 10시 31분 병풍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338명과 일반 승객, 승무원 등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MBN은 11시 1분 7초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자막을 내보냈고, MBC는 11시1분26초에 “안산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세월호는 8시 49분 처음 기울기 시작했고 YTN에 첫 보도가 나간 건 9시 19분이었다. 해경이 처음 도착한 건 9시 34분이었고 10시 31분에는 배가 완전히 뒤집혔다. 방송 속보에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뜨던 그 시점에는 이미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지만, 방송에서는 낙관적 보도가 계속되었다. 심지어 MBC는 팽목항 현장에 나가 있는 목포MBC기자가 “전원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거듭 보고한 뒤에도 ‘전원구조’ 자막을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세월호 침몰 8일째인 4월24일자 보도에서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사는 13명이 전부였다. 그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잠에 취해서, 침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동안, 관료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그러나 언론은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작업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따지지 않았다. 권력과 함께 ‘자발적 집행인’이 되어 ‘아름다운 전원 구조’ 신화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낡은 연안여객선이 침몰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생명 구조에 실패함으로써, 국가의 무능과 그 무능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은폐였다(박명림, 2015, 11쪽). 2016년 늦가을에서 2017년 봄까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국가는 어떻게 무능했고, 그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공권력을 오용했는지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악의 평범성’에 부역했는지 알고자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국내는 서울시 공무원을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과 대통령선거에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개입한 사건이 있었다. 삼성SDS와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어깨를 다쳤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KT는 대량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했고, 장애인의 날 경찰은 시위하던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코레일은 운임요금을 인상했고, 건강보험료는 ‘4월의 폭탄’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 정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 대부분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프로구와 프로축구 경기는 개최되었다. 대다수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4월16일 ‘오전 10시 31분’이었지만, 그 시각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갇혀 침몰하고 있었다.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세월호는 이전에 발생했던 수많은 참사처럼 그렇게 사건 사고의 하나로 묻힐 수 있었다. 최소한 이때까지 언론은 권력이 불러주는 내용만 충실하게 받아쓰고, 영상으로 실어 날랐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언론은 세월호 침몰을 수많은 사고 가운데 하나로 보도했기에 특별히 기억을 위한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세월호도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나 1994년 성수대교 교량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한 전소 사고처럼 하나로 대형사고로 문힐 수 있었다. 그러나 사소한 개인의 불행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사건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 의해 부활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노력으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이기심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의해 기억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 기억하기로 연결되었다. 참사 발생 90일째 되었던 2014년 7월 15일 팽목항에 임시로 차려진 JTBC <뉴스룸>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불쑥 찾아든다. 그는 누군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 그렇게 또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가족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다. 방송의 파급력은 컸다. 2014년 7월 15일 이전 방송 보도가 침몰하는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는 그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기억과 싸움이였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기억을 위한 싸움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제대로 기억하기를 위한 해방투쟁이 된 것이다.

만일 아들을 잃고 황망한 마음에 팽목항을 배회하던 한 아버지가 JTBC <뉴스룸> 생방송에 불쑥 뛰어 들지 않았다면, 세월호 보도는 사람이 사라진 사건으로만 남았을 수 있었다. 그 시점은 이미 세월호 참사가 언론에서도 대형사고의 하나라는 기록만 남기고 '망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기억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비로소 사건은 '기억'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을 통해 세월호 침몰을 지켜봤던 국민은 구조에 실패하는 국가의 무능도 함께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증발하는 모습까지 지켜봤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혐오와 배제를 통해 유가족의 슬픔을 개인적 일탈로 몰아세웠다. 언론은 2014년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힘 있는 권력자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을 때, 울부짖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육관에 있던 가족들이 대통령의 '구조' 약속에 손뼉 치는 모습만 보도했다. 병풍처럼 대통령을 둘러쌌던 '자발적 집행인'들은 2014년 4월 16일 현직 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보도하지 못했고, 2017년 3월 22일 전직 대통령의 꿈꿨던 7시간에 대해서는 비난하기 바빴다. 자발적 공조의 시간만 가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병풍도 앞바다 맹골수도 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하던 시간에 7시간 동안 대통령 직무에서 사라졌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행적은 오직 자신의 머리를 올리기 위해 미용사를 여러 차례 불렀다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위해 집을 나섰던 304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국가가 부재한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권력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가공권력은 그곳에 없었는지도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오히려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면죄부만 주고 있다. 그들은 관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를 지우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월 1일까지 3개월 여 청와대 앞마당에서 눈이 쌓이고 비가 내려도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노숙시위를 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해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지

만, 만들어진 언어규칙에 따라 구별 짓는 일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자기에는 과잉일 정도로 많지만, 타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결핍은 개개인의 고통을 자신을 방어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죄책감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 수순을 따라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 기억하기와 망각하기

세월호 사고는 보다 많은 이익과 효율만 찾는 자본주의 시장과 관리기능을 상실한 관료,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빚어낸 총체적인 사회적 참사였다. 국가가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인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이, 관료라는 제도가 '망각'이라는 해결책을 관철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망각하기'라는 정치적 고립과 긴 싸움을 해 왔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기업은 신문을 장악하여 편향적인 증언회피와 경험을 망각시키기 위한 편향을 드러냈다. 가장 빠른 해결은 언급하지 않고 망각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교신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경은 오랫동안 이를 거부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자료요구에 해당 기관은 바로 응해야 했지만 해경은 보안 사항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제적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잊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진다.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를 보자'는 주장이다.

독일의 전 대통령 바이체커(Richard von Weizaecker)는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우리는) 단지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과거 극복을 정의한다.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교훈 삼아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과거청산이라고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청산'은 불가능하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 없고, 피해자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해내고 미래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정도이다. 전후 독일에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주장하는 나치 청산과 과거 극복은 가해자의 '잊힐 권리' 정도이었다. 그들은 나치 잔혹사가 잊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과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쟁범죄를 외면하려는 자기합리화였다.

동서독 분단 후 동독에 진주한 소련군이 나치청산을 선결과제로 처리했을 때, 서독에 진주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반(反)불세비키'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거 극복을 시도했다. 연합군이 주장한 과거극복은 화해였다. 그 결과 나치전범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에 나갔고, 처벌하더라도 최소화하였다. 쇤베르너(Gerhard Schoenberner)는 과거 청산은 '검증'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인정한 잘못을 지속해서 청산하고 교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건 없는 '화해와 용서'라는 명분은 옳지 않았다. 과거를 사과하지 않고 '과거청산'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가해자를 피해자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예루살렘에 끌려가 재판 받은 아이히만처럼 '악'을 위해 복무한 독일인은 과거를 복기하고 인정하길 거부했다. 쇤베르너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를 용서할 때라야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청산’을 주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는 정치적 수사에 머물 수 있다. 상처 입은 자가 어찌 상처 입힌 자를 복기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속죄할 수밖에 없다. 설령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 그렇기에 과거는 청산할 수 없고, 다만 책임질 뿐이다.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진실이 규명되고, 어떻게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 아닌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기록물을 봉인시키고, 화해하자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입법과 사법을 통한 징벌적 청산은 가능한가? 지난 2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판결문이 보여주듯, 비관적이다. 법이 징벌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사건을 재구성했을 때 극히 일부이다. 법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조리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윤리와 도덕까지 법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기가 중요하다. 특정한 사건과 관련한 “기억들”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할 수 있다. 서로 기억하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이 기억하는 사건의 과정과 원인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완전한 진상 규명은 단순한 징벌을 위한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사건의 재구성이다.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오히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고, 나머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맡겨보자는 것이다. 빠른 ‘과거청산’과 마무리 그리고 망각하기가 종착점으로 향하는 여객선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잘못 쌓아온 오래된 기억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렇기에 미래를 위해 과거와 타협할 순 없는 노릇이다.

기억은 개인의 뇌리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단순한 개인적인 정보가 아닌 ‘집단적 기억’이고, 이 집단적 기억은 개인과 집단이 맞닥뜨린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공동의 언어이다. 공동의 언어는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작동하는 공동의 인식틀이다. 개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서로 소통하고 반응하면서 남기고 싶은 흔적의 나락을 갖게 되고, 이러한 흔적은 이들이 함께하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밑그림을 그리게 한다.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마당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슬픔을 멈추지 않은 행위’는 잃어버린 개인사를 집단적 기억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966년10월21일, 영국 웨일즈의 한 광산마을에서 노천광산이 붕괴하면서, 물에 젖은 석탄 부유물에 파묻혀 144명이 압사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마을 초등학교였다. 다섯 명의 교

사와 109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다. 애버반(Aberfan)사고가 발생했던 첫 주, 갓 집권한 노동당은 오랫동안 붕괴 위험을 무시하고 상황을 오판한 보수당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2007년에야 후속처리가 완결된 무능과 태만은 노동당 정권의 귀책이었다. 아이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영국 여왕이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은 민중의 고통에 감응하지 못하는 정치를 보여준 사례였다.

1998년6월3일, 독일 에쉴데(Eschede)에서 하노버로 가던 초고속열차(ICE) 한 대가 파열한 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에쉴데역 근교 교량과 부딪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01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은 차분하게 이루어졌고, 사고 3년 만에 에쉴데역에 기억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독일철도공사에게 귀책을 묻는 법정투쟁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독일 정부와 독일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은폐하지 않고 정의롭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2021년 4월 16일, 다시 일곱 번째 사월이 돌아온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시민들을 거리에서 조롱과 혐오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주동하고 언론이 '자발적 집행인'으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진실규명 과정은 사건을 은폐하고 망각하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은 청와대 앞마당에서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면 노숙시위를 해야만 했다. 그 사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승계하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함으로써 기억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봉인된 기록물을 열람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제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끝나야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닌가! 기억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는 틀이다. 이러한 기억은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소통을 통해서 공유되고 전승된다.

기억은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한 사람들의 것이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소멸한다.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기억은 없다. 경험과 기억이 제도로 정착된 것은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은 화려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존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유형유산과 더불어 참사를 기억하는 기록물(글과 영상, 음악, 미술작품, 연극, 공연 등)을 제작하여야만 후대에도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를 재현해 낼 수 있다. 기억은 사건을 증언해 줄 희생자와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제도화된 문화의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될 후대에

도 발생할 수 있는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감 기억으로 전승할 수 있다.

에버반 참사처럼 50년 동안 누군가의 탓을 하며 관료 뒤에 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든지 결정해야 한다. 책임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침묵하는 '위험의 외주화'로는 다가오는 일곱 번째 4월에 너무도 부끄러운 촛불 정부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병풍도 앞바다에 침몰한 진실을 인양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선선정의 이유이다.